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선상 시찰하고 있다. /뉴시스

동남권 메가시티 일정 文, 부산 뉴딜현장 방문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 보고 참석
"가덕도 공항, 세계 물류허브 될 것"**

**野 "4·7 보궐선거 40여일 남아
민주당 지원 선거운동 나서"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찾았다. 4·7부산시장 보궐선거가 40여 일 남은 가운데 대통령이 지역 균형 뉴딜 현장 일정에 나선 데 대해 야당은 '도를 넘은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에서 진행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일정을 소화했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부산·울산·경남 등 3개 광역단체 간 상생 협력을 통한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구축이 핵심인 사업이다.

부산·울산·경남 800만 시·도민 공동 생활권과 경제권 구축으로 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들 지역은 '동남권 메가시티' 구현에 필요한 4대 전략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도 동남권 메가시티 사업이 한국판 뉴딜, 지역 뉴딜 균형 구상과 일치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이날 일정에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 광역지자체장과 함께 흥남기 경제부총리, 문성혁 해양수

산부·전해철 행정안전부·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이광재 당 K-뉴딜위원회 본부장도 함께 참석해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의 차질 없는 이행에 대한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진구 부전역을 찾은 가운데 송철호 울산시장으로부터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 등이 골자인 '동남권 특별연합(생활·행정 공동체)' 조성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송 시장 보고에 문 대통령은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 및 생활·행정공동체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과 관련 청와대는 "작년부터 시작한 '한국판 뉴딜 현장'을 가다' 열한 번째 현장 행보에 해당하며, '지역균형 뉴딜 투어'로서는 두 번째 행보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아예 노골적인 선거 행보"라며 "4차, 5차 재난지원금 공세에도 맘이 안 놓였는지 가덕도, 동남권 메가시티로 민주당 지원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와대는 선거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대통령의 도를 넘은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수소차 안전교육, 충전소 설치기준 개선

산업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

수소차 운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수소차 운전자 안전교육 제도와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이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수소차는 차량 소유자 등 상시 운전자뿐 아니라 대리운전자, 렌터카 운전자 등 일회성 운전자도 안전 교육을 받아야 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됐다.

최근에는 관련 제도의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차량 안전성이 향상됐고 다른 차량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산업부는 수소차 가운데 일반 승용차 운전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소버스 운전자는 앞으로도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운전면허시험 수소차 안전 관리 포함, 무료 교육 동영상 제공, 수소차 가스 누출 점검 실시 등을 통해 기존 안전 교육과 같은 수준은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유통업체 매출 6.1% ↑ 온라인서 23% 급증

**산업부, 1월 유통업체 매출 동향
가전·문화 38%, 해외브랜드 22%
오프라인 업체 매출은 5.8% 줄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직접 매장에 가는 대신 온라인 구매를 선호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선물 수요가 늘며 온라인 부문은 큰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1년 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액은 약 12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1% 늘었다.

상품군별로는 ▲가전·문화(37.5%) ▲해외 유명 브랜드(21.9%) ▲생활·가구(9.8%) 순으로 매출이 늘었다. 반면 ▲패션·잡화(-13.5%) ▲서비스·기타(-7.3%)는 매출이 줄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매출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온라인은 매출이 22.6% 상승한 데 반해, 같은 기간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액은 5.8% 줄었다. 구매 건수는 14.8% 하락했고 매출액을 구매 건수로 나눈 구매단가는 10.6% 올랐다.

매장 방문 횟수를 줄이고 한 번에 대량 구매하는 최근 소비 흐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는 "매장 영업시간 제한, 한파 등에 따른 외부 활동 제약과 지난해와 비교해 늦춰진 설 연휴 시기 등이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했다.

업체별로 보면 대형마트 매출이 11.7% 큰 폭 줄었다. 백화점과 준대규모점포(SSM) 매출도 각각 6.3%, 3.3% 감소했다. 반대로 소비자 인접성이 좋은 편의점 매출은 2.4% 늘었다.

대형마트는 ▲잡화(-42.0%) ▲의류(-29.3%) ▲가정·생활(-26.6%) 품목을 중심으로 부진했다.

백화점은 ▲잡화(-31.8%) ▲여성

캐주얼(-30.5%) 등 패션 부문 매출이 매출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가정용품(41.4%), 해외 유명 브랜드(21.9%) 판매는 호조를 보였다.

편의점은 잡화(-18.2%)와 생활용품(-14.8%) 판매는 줄었지만 간편식 선호 경향으로 음료 등 가공식품(7.4%) 부문 매출이 증가했다.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22.6% 확대됐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가공식품 등 선물 판매가 크게 늘어나면서 식품군이 전체 온라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5%를 기록했다.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확대 등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전·전자(43.3%) ▲생활·가구(22.1%) 등의 매출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공연·여행 등 서비스·기타(-14.2%), 패션·의류(-0.1%) 부문 매출은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외부 활동 자제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현진 기자 hnj@

"투기억제" vs "감시 부작용" 부동산거래분석원 두고 충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힘 김종인 "투기억제 도움안돼
종전과 다른 모습 제시하는 게 현명"

더민주 진성준 "신고가 조작 등 감독"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부동산 시장의 감시·감독 차원에서 신설 필요성이 제기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한 만큼 '투기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여당과 '시장 감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지적한 야당이 대립 중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감시·감독 차원에서 신설 필요성이 제기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두고 "그런 감시로 부동산을 잡는다는 것은 부작용만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대한 비판이다.

김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근 정부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 24, 25번째(대책을) 발표했는데 한번도 성과를 못 거뒀다. 처음 한두 번 투기 대책을 발표했으면 무엇 때문에

실효가 없는지 냉정하게 평가하고 새롭게 만드는 모습은 안 보이고, 하다 하다 안 되니 억지로 부동산 감시청을 만들어 투기를 없애야 한다고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부동산거래분석원같이 감시 기구를) 만들어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는 발상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 (이는) 부동산 투기 억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인지하고 종전과 다른 모습을 제시하는 게 현명한 것"이라고 당부했다.

반면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이 골자인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

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진성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신고가 조작이라는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해 면밀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이른바 '빅브라더'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 법이 모든 부동산 거래 행위를 다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다"라며 "(거래분석원이 확인하는) 부동산 의심 거래 건수는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매매 건수 가운데 2% 정도 된다. (또) 위법 사실들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어 과도한 정보 제공은 할 수가 없고 필요 최소한에 그치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국회 국토위원회 전문위원은 "부동산 거래 기준이 모호하고,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역할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우려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해당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최영훈 기자

한·중미 FTA '북·남미 네트워크' 완성

산업부, 내달 1일 파나마와 FTA 발효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유일한 미발효국이었던 파나마가 최근 국내 발효 절차를 마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한·중미 FTA를 전체 발효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는 파나마를 제외한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등 4개국과 한·중미 FTA를 부분 발효한 상태였다.

이 FTA는 미국, 캐나다, 칠레, 페루, 콜롬비아에 이어 미주 국가와 6번

째로 체결한 협정이다. 이번 전체 발표에 따라 중미는 물론 북·남미를 통합하는 거대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됐다.

한국과 중미 5개국은 전체 품목 수 기준 95% 이상의 높은 시장 개방을 했다. 파나마의 경우 총수입액 기준 99.3%에 달하는 자유화를 통해 가장 큰 폭의 관세 철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혜 품목에는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이 꼽힌다.

특히, 대 파나마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알로에 음료 품목에 대한 관세(10%)가 즉시 철폐하기로 해 시장점유율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파나마산 커피에 대한 우리 측 관세도 즉시 철폐된다. 가공커피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파나마 운하 이용 상위국 가라는 점에서 이곳 물류기지를 거점으로 주변 국가와의 중계무역도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 국가의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현진 기자